



여의도포커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영역 특화 ‘버티컬 AI’에 인공지능산업 성패 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당과 함께 헌신해 온 당원들의 ‘민주당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입된 이른바 ‘종이 당원’이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당원 등은 철저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당원 자격 강화를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대해 “30년 넘게 경제적으로 침체한 고향 대구를 위해 부지런하고 겸손한 김부겸이라는 좋은 재료가 정말 맛있는 ‘대구 경제 발전’의 탕을 끓여내고 싶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취지는.

△ 선거는 본디 비전과 정책의 대결이지, 대통령과의 인연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당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과도하게 언급될 경우, 자칫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께 큰 부답을 드리는 일이며,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지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선거의 본질인 ‘국물’이라면, 대통령과의 인연은 맛을 돋우는 ‘양념’에 불과하다. 양념은 조금만 들어가도 충분하다. 일부 경선과정을 보면 정작 중요한 국물은 보이지 않고, 양념이 과도하게 들어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민주당 경제형별·민사책임합리화 TF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 군사독재 시절의 형벌 만능주의가 지금도 범조준 곳곳에 남아 있고, 사소한 잘못에도 형벌을 부과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생업을 끊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TF는 출범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별 완화 과제를 제시했고, 조만간 200개 이상의 3차 과제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중사하는 숙박업·미용업 등에서 업소명 변경 같은 경미한 신고 누락에 부과된 형벌이 이제는 과태료로 전환됐다.

특히 배임죄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구성요건 때문에 ‘삼라만상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과도한 형벌의 대표 사례다.

TF는 배임죄 합리화의 방향을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으로 분명히 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배임으로 공격받을 우려를 차단하고, 검찰과 법원 재량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현행 배임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대체하겠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민사책임 합리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간 형사 고소가 민사분쟁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도, 대표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함께

정비해 민사절차만으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당원에 대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원자격 심사 강화’를 주장했다.

△ 단순히 표의 수치적 평등을 넘어 당을 아끼는 진정한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인 1표제에 대한 논의는 제가 당직자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있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를

우리나라처럼 전문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범용 AI와 달리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와 법적 공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의료 AI의 경우 신약 개발이나 정밀 의료 연구에 필수적인 의료데이터 활용에 규제가 많다. 살아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면 사자의 데이터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생명윤리법이 사망자를 생존자와 동일하게 규

보기엔 다를 바 없지만, 온전히 적용할 때까지 넉넉한 기다림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잦은 편견과 질책 속에 고립된다. 가족들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한다.

가장 뼈아프게 보는 지점은 바로 청년 느린학습자의 현실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년들은 당장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다. 거듭된 상처는 깊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끝내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토론회가 열리던 날, 멀리서 현수막만 보고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셨다. 집에만 갇힌 서른 후반의 자녀를 지켜보는 심정은 타들이 가는 지옥 같은 것이다.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2024년 8월 ‘경제선지능 지원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방점은 ‘청년 취업망 구축’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전선망 구축과 고용주 지원 규정을 법안의 핵심으로 넣은 이유다. 수차례 토론회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면서, 청년들이 직접 일하는 자립 현장을 찾아가 봤다. 이 모든 여정은 당사자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지원회’와의 굳건한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협약식은 단순한 경선을 위한 행보를 넘어 그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약속이다.

-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때려야 땀 수 없는 깊은 인연이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 후배다. 선배가 도와달라는데 꼼짝할 수가 없죠(웃음).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을 함께하며 쌓은 신뢰가 워낙 두텁다. 또 고향 대구에 대한 이해와 가교 역할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대위 주축을 맡는 게 전략적으로 중

요하다. 대구 출신이다 보니 지역 분들과 소통할 때 별도의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정서적 공감대가 높다. 특히 최근 국회 행정위원장을 맡게 돼, 대구·경북 통합이나 군 공항 문제 같은 지역 숙원 사업들을 중앙에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힘지’ 대구를 향한 부채감과 책임감이다. 솔직히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대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고생하는 동지들을 보면 늘 몽롱하고 미안했다. 대구가 변화하면 영남지역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김 전 총리도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셨다면 이런 힘든 결단을 안 하셨을 거다. 30년 넘게 경제적으로 침체한 고향 대구를 위해 부지런하고 겸손한 김부겸이라는 좋은 재료가 정말 맛있는 ‘대구 경제 발전’의 탕을 끓여내고 싶다. 그 길에 가진 모든 역량을 보태려 한다.

- 초선 때부터 줄곧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325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소위 말하는 ‘명당’과는 거리가 멀다. 저층인 대도 3층 로비 바로 아래리 행사가 있는 날이면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325호실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곳에 담긴 특별한 ‘정신’ 때문이다. 이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의원 시절 사용하셨다. 또 이 숫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숫자이다. 문 전 대통령님께서서는 그분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이 못다 이룬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방을 선택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었다. 비록 소음도 많고 번잡스러운 곳이지만, 문 전 대통령님이 없으셨던 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며 일하는 것이 제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경제형별·민사책임합리화TF 341개 과제 제시 청년 ‘느린학습자’ 취업망 구축에 최우선 방점 “행정통합·군공항 등 현안 추진하는데 기여할 터”

평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오랜 시간 당과 함께 헌신해 온 당원들의 ‘민주당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입된 이른바 ‘종이 당원’이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당원 등은 철저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 당원 자격 심사 강화를 주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가 전문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특정 산업·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법률 기술) 진흥법’을 발표했다. 리걸테크와 의료 AI는

올하는 바람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 유족 전원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데이터 활용 동의를 면제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범용 AI 시장에서의 추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감정법률과 의료라는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한 전문가 AI를 육성한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 최근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지원회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배경은.

△ ‘느린학습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조용한 비명’이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결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권철승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